

‘순직해병 특검법’ 또 좌초… 與野, 제3자 특검법 합의할까

찬성 194표로 재의결 문턱 못넘어
해병대 예비역 “韓, 특검법 발의하라”
韓, 전대 중 ‘제3자 특검법안’ 제안
이재명·與 반대 기류에 논의 미지수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할 경우의 결정적 수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특검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외친 후 퇴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송법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순직해병 특검법 찬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농성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하는 방송4법 추진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에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재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렇거면 왜 대정부 질문을 못하게 했나”라며 “개원식까지 못 열게 6월 국회를 왜 엉망으로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답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나”라며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역시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계도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벗어나보고자 정부여당과 야당에 중재안을 드린 것”이라며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에게 호된 비판을 들었으나 그래도 한발 물러나는 것이 1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부의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이 끝내 좌초됨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제3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여당 내에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신속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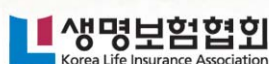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MBC 노조 탄압 의혹에 이진숙 “인정하지 않아”

(방송위원장 후보자)

파업 와해 위한 용역계약 논란 부인
불법 사찰 의혹엔 “사내 보안 위한 것”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C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MBC 노조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의 지배사인 주식회사 소셜홀딩스와 2억5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계약서엔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위적으로 가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론을 조작해서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통해 주도권을 지켰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는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아마 일반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파업은 공정한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며 “그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

며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경쟁진으로서)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에게 트로이카(보안프로그램)를 통한 MBC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위키트리에) 시켰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트라넷이 해킹을 당하고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의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이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보도 방향성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께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불공정한 보도 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균형각을 가지고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더더욱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윤도현 기자 yunbgh0611@